

민주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기다리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에 여야 일제히 유감 표명…한국당 ‘촛불 청구서’ 바른미래 ‘민노총 빼고 대화’…평화당 ‘노정 불신 못넘어’

여야 정치권은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지만 내용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을 뺀 경사노위 가동’을 촉구했고 민주평화당은 ‘노정 간의 불신’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

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에 적극 나설 때 비로소 더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념을 위한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더 열악한 사람들

을 위한 배려를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다”며 “사실상 기득권 세력이 된 민주노총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위 ‘촛불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부는 20년간 할 만큼 했으니 민주노총을 빼고 경사노위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강자의 권력이며, 정파 이익에 치우친 무소불위 정치집단이라는 것이 여제 대의원대회 결과 나타났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같은 노정 간의 불신의 벽을 못 넘어 안타깝다”면서 “양대 노정 면담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도 무색하게 됐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에서 “최근의 일방적이고 후퇴된 노동정책에 대한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불신이 매우 컸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도 보수세력에 편승한 ‘강성노조 프레임’과 친기업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나비되어 날으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관련기사 22면

문대통령,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

‘50·60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 논란’ 등을 야기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 보좌관이 이날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김 보좌관은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이 조금 전 김 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이 사의를 표하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문제 발생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김 보좌관은 청와대 보좌관직은 물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차관급인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중도에 하차한 것은 2017년 11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사퇴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이후 14개월 만이다.

한편, 청와대는 탄핵민청외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사실상 수리하고 탁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첫 1위 황교안

리얼미터 ... 이낙연 2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을 통틀어 처음으로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3.6%포인트 상승한 17.1%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대비 1.4%포인트 오른 15.3%

를 기록했다. 황 전 총리가 이 총리를 앞선 것은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7.8%, 박원순 서울시장 7.2%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6.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3%,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6.0%,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5.9%, 오세훈 전 서울시장 5.3% 등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4.3%),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3.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2.3%)가 그 뒤를 이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제식구 감싸기”...야 “물타기”

이해충돌 논란 공방 지속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놓고 29일에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 스스로 장 의원과 송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한국당은 여당이 손 의원 문제를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 사례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적 모델”이라며 “한국당은 물타기 시도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제원·송언석 의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 의원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무대응 전략을 펼친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분위기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과 여당을 겨냥, “오세훈 갑자기 물타기의 대상이 된 물이 된 것 같다. 깨끗한 물인 송언석 의원

은 오염된 물과는 안 섞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고, 손 의원의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와 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이 없는 선진적인 규정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공무원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 경우 마지막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3년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른미래당은 2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잡고 있으며 평화당은 30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한국당 당권 출마 선언

당 선관위,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책임당원 자격 부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담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권 도전의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 정권과 손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당 대표가 된다면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 출세안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 없이 거리를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

을 확대해 강한 한국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정황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기록에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최소실이란 사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27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박관용 선거위원장은 진지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해진 뒤 비대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의 이번 결의안으로 더이상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임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임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임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임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